

‘빅텐트’ 사라진 제3지대 현역 의원들… 지지율 정체 ‘고전’

총선 ‘정권안정 vs 정권심판’ 구도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열풍 잠잠 탈당과정 관계 악화… 단일화 난항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이유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정당에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정권안정론과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맞붙으면서 제22대 총선의 구도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짜여졌고, 제3지대 정당이 ‘빅텐트’를 꾸리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지역구 선거에도 힘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3정당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의 경우 지역구 25석과 비례대표 13석을 합쳐 총 38석의 의석수를 확보하며 호남 지역구 기반의 저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으로 옮긴 현역 국회의원들이 어느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동시에 비례대표 투표에 선 조국혁신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이 도드라졌다. 조용천·이원욱 의원은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각각 경기 남양주갑과 경기 화성정에 출마했다. 김종민·설현·홍영표·박영순 의원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도의 ‘새로운미래’에 합류해 각각 세종시갑, 경기 부천시을, 인천 부평구을, 대전 대덕구에 출마했다. 다만, 세종갑에선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종민 의원의 약진 가

가능도 보인다.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가 본인이 창당한 시대전환 의원으로 활동한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일찌감치 옮겨 서울 마포갑에 도전 중이다. 또한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이었다가 현역 민주당 의원 하위 평가가 20%에 들었다는 통보를 받고 국민의힘에 합류한 김영주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서 출마했다. 5선 의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왼쪽 세번째부터)이 지난달 12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고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했다. 양향자 의원도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후 개혁신당과 합당해 경기 용인시갑에 출마했다.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 의원인 허은아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해 서울 영등포갑에 도전장을 던졌다. 서울 영등포갑은 당적을 옮긴 현역 의원이 2명이나 출마하면서,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허 의원이 선거의 ‘캐스팅보트’를 쥐

는 꼴이 됐다. 역시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의원인 황보승희 의원은 자유통합당으로 옮겨 비례후보 1번에 등록됐다. 거대 정당에서 벗어난 후보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출마했으나,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고 있다. 또한, 탈당하면서 기존 정당과 관계가 악화된 후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기도 여의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野 주요행보

“주차빌런 강력처벌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취향 저격’ 7대 공약 발표 ‘불법압표 근절 등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 도입,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대폭 확대 실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파악한 민심을 반영한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향저격 공약발표 행사를 갖고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대폭 확대 실시 ▲전기차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 대폭 확대 ▲게임중독 근거법 개정, 인디게임 공공플랫폼 활성화, 불공정한 게임환경 개선 ▲불법압표 근절 ▲바다치어 방류 확대 ▲군 장병 교통비 50% 할인 국방패스 도입을 22대 국회에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원의 자격으로 공약 발표를 한 오창석 작가는 “약 15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주차 빌런’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사유지의 불법 주차 행태, 특히 일반 서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초고가의 외제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유하고 있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의 제보가 많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 허영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 불법 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주차빌런 강력 처벌 법안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오 작가는 난임 치료 유급휴가제도 대폭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준비한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생 혜택이 매우 좋으면서도 정작 1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 부부를 위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에 서영석 의원이 제안하기도 했었던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앞으로도 여러 의견들, 마음껏 제안해달라. 열심히 ‘네티팅’하여 국민 삶을 바꿀 작은 변화의 아이디어까지, 놓치지 않고 속속들이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범죄자 영업에 당하지마라”

국민의힘

한동훈 총청권 방문… 지지 호소 “총선 이기면 의원 특권 사라질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총청권을 찾아 중원 공략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을 시작으로 아산, 천안, 세종, 대전을 비롯해 충북 청주와 음성을 돌며 “지금은 이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다. 뭉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흠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는다”면서 지지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총청권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범죄자들에게 영업 당하지 마라”고 신신당부한 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천안 청당신도시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여러분, 범죄자들에게 영업 당하지 마라”며 “저 사람들은 자기방어하고자 기속 챙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 말이 과하냐. 과하지 않다. 당장 내세우는 것이 ‘자기 감옥 안 가겠다. 자기 감옥 가게 한 사람에게 우리 죄는 맞지만, 복수하겠다’ 이 거다”며 “이게 민주주의 정치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국회의원들이 특권층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세종살리기 집중지원유세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며 지지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구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기 바라나. 국회의원의 세비가 확 낮춰지길 바라나. 국회의원들이 각종 특권을 행사하며 마치 특권계급인 양 행세하는 거 그만 그치기를 바라나. 그걸 저희가 해낼 것이다”며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그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천안 성성호수공원에서 진행된 지원 유세에서 한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70년 간 이런 정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말 정말 들려주고 싶다”며 “그분이 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

尹, 제15회 국무회의 주재 “의료개혁, 과감히 재정지원”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재원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재원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1일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라고 했다.

이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